조선대 법인 정상화 왜 늦어지나

교과부 2년전 요구 … 이제와서 '나몰라라'

사학분쟁조정위원들 '법리'에 집착 현실 외면

구 경영진 시간 끌기 … 출석 요구 무대응 일관

조선대 법인정상화 방안이 정부에 제출된 이후 8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조선대 정이사 체제 전환문제 해결의 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달려 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매주 첫 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기회의 외에 임시회의를 포함, 모두 18차례나 회의를 가졌다. 사학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정상화 요건을 갖추진 못한 사학들에 임시이사를 재선임하는 등 나름대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정작 조선대 등 정상화 추진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 의지 있나=사학분쟁조정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다. 기한 연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선대 법인팀 관계자는 "개별 학교에서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인데도 정작 사학분쟁조정위 위원들이 그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그나마 교수 출신 위원들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소 적극적이지만, 법조인 출신 위원들은 법리만 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3명)과 국회의장(3명), 대법원장(5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11명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중 7명은 교수, 4명은 법조인이다.

조선대가 정상화 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 2006년 교과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나 정작 교과부는 정책조정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구 경영진의 지연 작전=사학분쟁조정위는 18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조선대 법인과 정이사 선임권을 요구하고 있는 구 경영진(임시이사 체제 직전 정이사 3명)에 4차례 출석요구를 했다.

위원들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구 경영진은 지난 5월 8일 첫 대면에, 그것도 대리인 3명이 참석했을 뿐 이후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2회 출석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며 구 경영진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학분쟁조정위에 불만을 터뜨렸다.

구 경영진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학분쟁조정위가 의결을 미루도록 압박하는 요인이다. 우익 성향의 단체들로 이뤄진 '임시이사 파견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비리혐의가 있다"며 조선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권 눈치보기인가=거대 여당 등장 등 정치권 재편도 사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늦추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제18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사학법 재개정이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 당시에도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해 결국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했었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학분쟁조정위 결정이 구 경영진에 유리하게 흘러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최근 교과부로부터 조선대가 추천한 정이사 후보의 신상에 대한 질의를 받는 등 정이사 선임을 앞둔 적극적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다소 희망적이다"며 "사학분쟁조정위가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대 정상화 추진과정

1988. 1. 8	재단 횡포에 항거한 조선대 교수 및 학생들 농성 113일째 공권력 투입
1988. 2. 4	문교부, 종합감사(1997년 말) 실시 후 이사 해임 및 임시이사 파견
1988. 9. 6	구성원 추대에 의해 조선대 제 8대 총장으로 이돈명 변호사 취임
2006. 4.12	교육인적자원부, 조선대에 정상화방안 요구
2006. 9.11	조선대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2007.12. 5	조선대법인 새이사 추진위원회 구성
2007.12.2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008. 1. 2	조선대법인 학원정상화 방안 제출
2008. 5. 8	사학분쟁조정위 소위원회서 구성원과 구 경영진 의견 청취
2008. 6.30	조선대법인 임시이사 임기 만료 및 이사부존재 시작
2008. 8.14	사학분쟁조정위 조선대 관련 특별소위 구성
2008. 8.28	조선대법인 긴급이사회 개최
2008. 9. 4	사학분쟁조정위 제19차 회의 예정

조선대를 비롯,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학교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초 서울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젊은 정치 지도자 양성 재집권 엔진 역할할 것"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소 소장

"민주정책연구소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과 재집권을 위한 엔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민주정책연구소의 초대 수장을 맡은 김효석(담양·곡성·구례)의원은 지난달 3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 한반도의 미래는 커다란 시련과 도전을 맞고 있다"며 "오만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맞설 대안과 당의 전략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무엇을 반대하는지 분명히 알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참여형 정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정책연구소는 특히 젊은 정치 지도자, 민주적 소양을 가진 지도자를 대폭 양성할 방침이다"며 "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 및 민생 밀착형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광주발전연구원 등 각 지역별 연구기관과의 연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시련의 시기며 갈 길은 멀다"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마련과 민주당의 도약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의정 활동 내용은 없고 상대 비난만 …"

나주시의회 민주 의원들, 의정보고서 물의

"의정 활동 내용은 없고 상대방 비난만 가득한 의정보고서네."

나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장 처벌 탄원서를 낸데 이어 비난 일색의 의정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비례대표를 포함 민주당 소속 9명이 각자의 선거구에 의정보고서 형식을 빌린 서한을 발송했다. A4용지 5장 분량인 이 편지에는 무소속 동료 의원과 신정훈 시장, 사회단체 등을 맹비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들은 "후반기 원구성 지연 등 파행원인은 신사협정을 파기한 정모 의원 등 무소속측에 있다"며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억지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시장의 경우 지지 세력만을 위한 편향된 시정으로 지역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신 시장 취임이후 불법, 탈법, 무법이 판을 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일부 시민단체들도 시정 잘못을 따지기는 커녕 시장편에 서서 옹호하고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고 부적절한 처사를 거듭했다"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갈등과 반목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원구성 파행에 항의, 의정비 반납과 의원직 사퇴 요구와 의회 청사 봉쇄 등을 강행한 시민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나주지역 5천여가구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에앞서 재판에 계류중이었던 신 시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2명을 제외한 7명 연명으로 보내 무소속 등의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측 한 의원은 "원 구성 파행이 민주당측에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9명 의원이 모여 작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무소속 한 의원은 "의회 파행을 불렀던 이들이 적반하장식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보낸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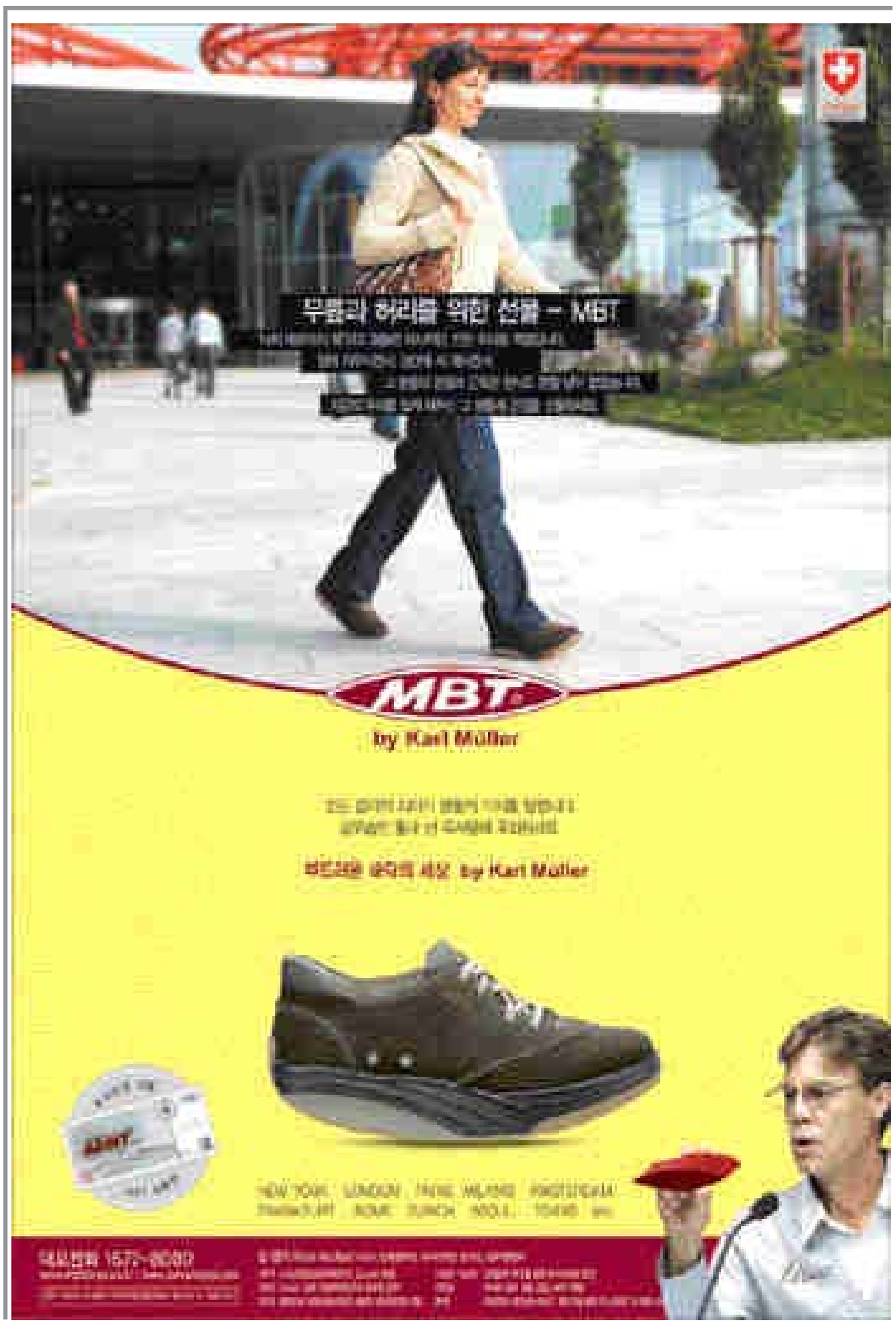
/나주=정칠헌기자 chjung@

광주시의회 교사위장 후보 김동식·나종천 의원 등록

광주시의회는 "1일 선거가 치러지는 후반기 교육사회위원장 후보를 지난달 29일 마감한 결과, 김동식(70·서구 2)·나종천(65·남구 2) 의원 등 2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교사위원장 보궐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해 낙선한데 이어 또다시 후보로 나섰고, 나 의원도 마감일인 지난달 29일 후보로 등록했다.

나 의원은 "주변에서 상임위원장 불출마를 두고 금품로비설에 휘말려 출마를 포기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 결백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출마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1일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견 발표를 거친 뒤 전체 의원투표를 거쳐 교사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